

## 요약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사회보험료 납부 포기 합의를 전면 무효화함. 이는 그동안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약 35~40%)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포기 약정을 차단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둔화가 예상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예비적 저축이 줄어들고 내수가 확대됨에 따라 보충형 상업보험의 성장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2025년 8월 1일 발표한 「노동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한 해석(II)」을 통해 ‘사회보험 자발적 포기’ 약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함)
  -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5년 8월 1일 발표한 ‘노동분쟁 사건에 대한 해석 제2호’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사회보험 납부 포기 합의를 법적으로 무효화했음
    - 이번 조치는 사회보험법상 강행규정을 사법적으로 재확인하여 전국적 판례 기준을 통일하고, 노동계약서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보험 포기 합의를 무효화하며,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경제적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9월 1일부터 시행됨
  -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압박, 낮은 가입률과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성장모델 전환 압력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보장제도 개편과 내수·복지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게 됨<sup>2)</sup>
    -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일부 지역의 연금기금 보강과 복지전환 기반 마련이 정책 의도라는 평가가 있음
    - 비용부담 회피를 위해 현금 보전·용역 및 파견 구조·일용직화 등이 관행화되어 있고, 한 인사 컨설팅 업체의 대규모 조사에서는 가입률 28.4%가 언급될 정도로 집행 불균형이 컸음
    -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저임금·저부담’ 기반의 비용경쟁에서 내수·복지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거시 기조와도 부합됨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기업과 개인의 합산 부담률이 35~40%에 달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28%에 불과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연금·의료·실업·산재·출산 보험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임
    - 일반적으로 기업은 임금의 약 25~30%, 개인은 약 10% 수준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아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1) CCTV(2025. 8. 1.), “最高法发布司法解释 涉及社会保险、竞业限制、福利待遇等热点争议问题”

2) Reuters(2025. 8. 21.), “China faces pivotal welfare reform test as court ruling hits jobs, small firms”

- 또한 사회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일 0.05%의 가산금(滯納金)이 부과되고,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한 제재 조치를 두고 있으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그동안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자발적 포기’ 합의는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과 고용 비용 절감 욕구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으며,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관행을 사실상 용인 및 유보해 왔음

-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사회보험 보조금(社保補助)’ 방식을 활용해 왔으며, 근로자들 또한 단기적인 실수령액 증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납부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했음
  - 이러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불안정하고, 지역별 집행 수준의 편차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가 확산되었음
- 기업 부담 급증 방지와 노동 고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이원적 징수체계와 행정 분절이라는 제도적 한계, 그리고 비정형 고용 확산이라는 노동시장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해 왔음
  - 이로 인해 의무가입과 납부를 규정한 강행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회보험료 납부 포기 합의’ 관행을 장기간 사실상 묵인하거나 집행을 유보하게 되었음

○ 향후 기업은 사회보험 포기 합의 무효화로 인한 소급 납부와 소송 리스크 증가, 인건비 상승 압박에 직면하고, 근로자는 권리 보호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 둔화 부작용이 예상됨

- 기업 측면에서 사회보험 포기 합의가 전면 무효화되면서 과거 미납분에 대한 소급 납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규모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외국계 기업 역시 현지 인사관리 과정에서 사회보험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
- 특히 건설·제조·서비스업 등 노무집약 업종은 인건비 상승 압박과 함께 가격 전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사회보험료 부담은 원가에 반영되어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 또는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근로자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고용 둔화가 예상됨
  - 법원이 사회보험 포기 합의를 무효로 인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늘어난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채용 위축, 임금 조정, 나아가 폐업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고용 둔화라는 부작용이 예상됨

○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회보험 강화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여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보험업계에 보충형 상업보험 수요 확대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중국의 사회보장·보건 지출(의료·실업·연금 급여) 확대가 가계의 예비적 저축을 줄여 소비를 늘릴 것으로 보임<sup>3)</sup>
- 이로 인해 사회보험의 기본 보장 한계(보장 한도·공제·대기 기간 등)를 메우려는 보충형 상품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큼<sup>4)</sup>

3) IMF(2022. 2. 4.), "People's Republic of China: Selected Issues"

4) Financial Times(2025. 9. 1.), "China rules business must help pick up pension bill as population ages"